

## 민선자치 30년, 자치분권 변화 과정과 수원특례시의 미래 대응 전략

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

### 요 약

#### ■ 민선자치 30년, 수원의 자치분권 과정은 성과와 한계가 공존

- (성과) 시민참여 및 협치 문화 정착, 특례시 승격 등을 통해 기초 지자체 자치분권 향상
- (한계) 지역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보는 여전히 미흡

#### ■ 미래 자치분권은 생산인구 감소, AI, 기후위기 등으로 급격한 변화 예상

- 큰 틀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‘시민체감도’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
- 동시에 ‘지역 경쟁력’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자치 및 행정의 재구조화 필요

### 정책제언

#### 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 전략으로 특례시 제도 개선에 집중

- (미래전망) 지방분권 개선과 AI 기반의 디지털 행정으로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일상화
- (대응논리) 대도시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차등분권 방식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
- (핵심전략) 특례시 지원 특별법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특례시에 필요한 핵심 권한의 ‘법제화’ 노력 필요

#### 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지역 간 연계·협력을 통해 경쟁력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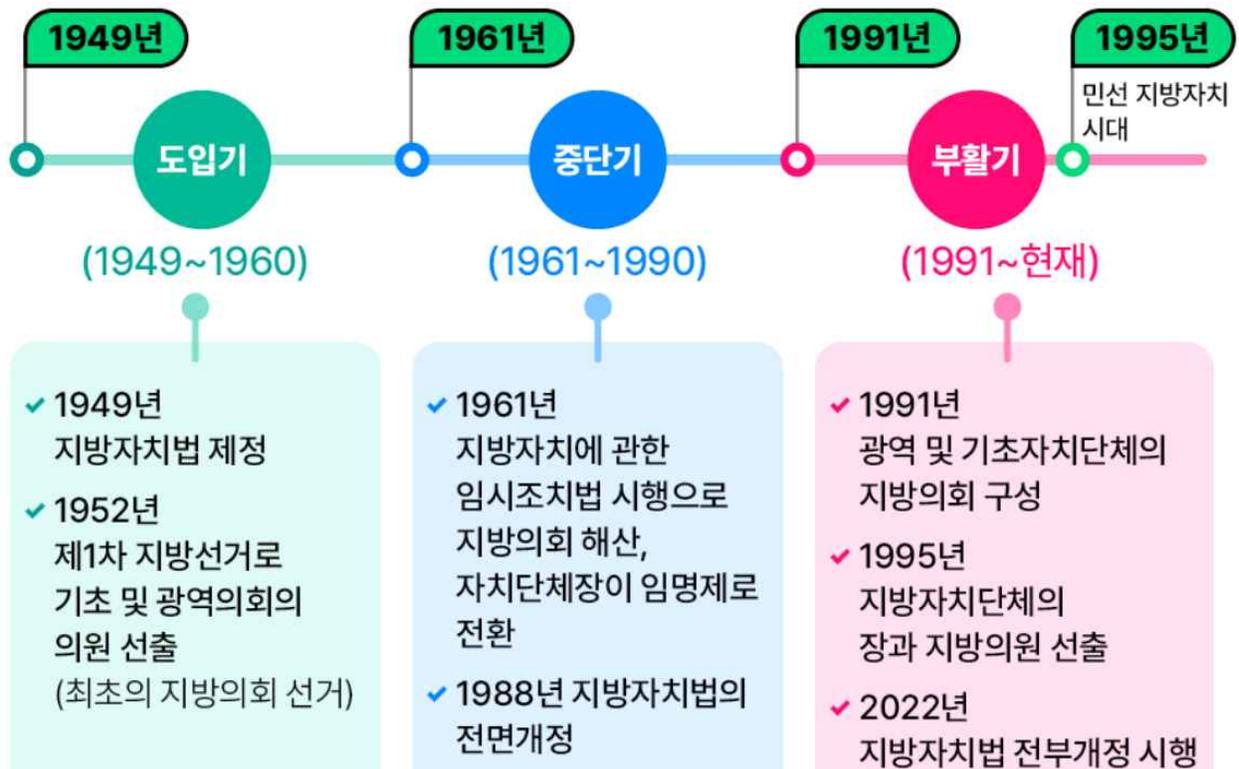
- (미래전망) 지자체 단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일상화되어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등장
- (대응논리) 생활권과 행정권을 통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, 이러한 시도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
- (핵심전략) 산업적 시너지 제고 관점에서 수원과 인접한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의 주요 도시를 묶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‘K-메가시티’ 구성 추진

## 1. 대한민국 자치분권 변화 과정

□ 1961년 ‘5.16 군사정변’을 계기로 중단된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민선 단체장 직접선거를 통해 약 30년 만에 부활

- 1989년 노태우 대통령과 야 3당 총재의 합의로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
-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,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지방자치 실시가 난항에 봉착
- 1990년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의 15일간 단식 투쟁을 통해 지방자치 제도 시행 확정
  - 1991년 상반기 지방의회 선거 실시, 1995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<sup>1)</sup>

<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적 전개 과정>



출처: 서울특별시 홈페이지

□ 지방자치 부활 이후, 기존 수직적 관계의 정부간(중앙-지방)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자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율성 확대 조치 시행

- 법률적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, 지방분권 특별법 등 제정
- 조직적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, 지방분권촉진위원회, 자치분권위원회 등의 기구를 운영
-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

1) 당초 자치단체장 선거는 1994년 6월 실시하기로 했으나, 정치적 갈등으로 1년 늦춰진 1995년 6월로 최종 확정됨. 이에 민선1기 자치단체장 임기는 4년이 아닌 3년으로 제한됨(한겨레, 2020.07.26)

### <지방자치 부활 이후 각 정권별 자치분권 제도 변화>

구분	지방자치 추진방향	법률	실행조직	주요 정책
김대중	• 작지만 효율적 정부	•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	• 지방이양합동심의회	• 지방교부세율 인상 • 지방교육세 신설 • 주민감사청구제 도입
노무현	•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	• 지방분권특별법 • 신행정수도특별법(위한) • 제주특별자치도법	•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	• 지방교부세율 인상 • 참여예산제 도입 • 총액인건비제 시행 • 지방재정공시제 도입
이명박	•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	• 지방분권촉진특별법 • 행정체제개편 특별법	•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•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	•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• 지방소비세 도입 • 지방소득세 도입
박근혜	• 성숙한 지방자치, 행복한 지역주민	•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	• 지방자치발전위원회	•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•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 • 통합재정 수지 산출 도입
문재인	•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	•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• 지방이양일괄법	• 자치분권위원회	• 지방소비세율 인상 • 자치분권사전협약제 도입 • 자치경찰제 도입 • 지방이양일괄법 제정
윤석열	•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	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	• 지방시대위원회	• 4대 특구 운영

### □ 지방자치 제도의 점진적 변화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했으나, 동시에 여러 문제점 노출

-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속 지방이양,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등 긍정적 효과 창출
- 반면, 광역 위주의 자치행정 구조 재설계, 중앙-지방 세원 불균형에 따른 중앙의존 심화 등 부정적 효과 발생

### <지방자치 30년,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>

구분	성과	과제
민주주의 발전	• 주민참여 제도 도입으로 정치적 민주성과 대표성 확대 • 민관 협치를 통한 시민사회 성장 및 참여기반 강화	• 지방의회 견제기능 약화 및 주민참여 제도의 실효성 부족 • 중앙정치 중심의 비효율적 정치경쟁으로 지역의제 왜곡
자치 기반강화	• 법령정비 및 재정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 제도적 기반 강화 • 지방행정의 독립성 확대와 자치단체 간 협력 기구 활성화	• 중앙정부 의존과 권한중첩으로 지방의 자율성·책임성 저해 • 자치단체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대응 역량 부족
생활 여건개선	• 복지 교육 중심의 생활SOC 확충으로 지역인프라 개선 • 주민 편의 중심의 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	•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집중과 지역 간 격차 발생 • 민원 창구 확대에도 불구, 실질적 행정 편의성 개선 미흡
지역 특화발전	•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연계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•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·관광 자원 개발과 시민 화합 기여	• 중복 사업과 경쟁적 투자로 예산 낭비 및 정책 비효율 발생 • 수도권 집중, 역량 재정부족으로 지역간 불균형과 격차 심화

출처: 전성만(2025: 36)

## 2. 수원시 자치분권 변화과정

### □ 지방자치 부활 이후, 수원특례시는 총 3명의 단체장이 재임(현직 제외)하며 시정을 운영함

- 민선 1기부터 민선 7기까지 총 3명의 단체장이 재임했으며, 동시에 모두 연임
  - 민선 5-6-7기까지 재임한 염태영 시장의 경우,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최초 3선 달성
- 수원특례시의 시정 방향과 중점사업은 수원이 처한 도시 현안을 바탕으로 연속성과 차별성을 갖고 진행됨
  - 민선 1-2기는 자치행정 기반 조성 차원에서 행정역량 강화와 함께 문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함
    - 클린시티 수원 조성,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
  - 민선 3-4기는 도시 인프라 기반 조성이 강조됨. 도로 및 교통, 교육 환경 개선에 시 행정력이 집중된 시기임
    -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, 국도1호선 입체화 공사 등
  - 민선 5-6-7기의 경우, 거버넌스 행정 관점에서 시민 참여와 중앙정부 권한이양을 적극 추진
    - 도심형 마을만들기, 수원특례시 추진 등

#### <민선 시기별 수원시정 운영 특징>2)

구분	민선 1-2기 (심재덕)	민선 3-4기 (김용서)	민선 5-6-7기 (염태영)
시정 방향	깨끗하고 투명한 시 행정	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	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
중점 사업 <sup>3)</su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클린시티 수원</li> <li>• 수원컨벤션시티21</li> <li>• WHO의 안전도시 인증</li> <li>•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</li> <li>• 교통난해소를 위한 인프라구축</li> <li>• 화성행궁복원 창룡문 정비 등</li> <li>• 문화인프라 확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원외국어고등학교, 평생학습 으뜸도시 조성</li> <li>• 광고 테크노밸리 입지기반 조성</li> <li>• 수원 지방산업단지 조성</li> <li>• 국도1호선 입체화 공사</li> <li>• 하천 살리기 사업</li> <li>• 사회복지시설 확충</li> <li>• 공군 비행장 항공소음 민원해소 대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</li> <li>•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</li> <li>• 생태교통 수원 2013, 녹색 도시회랑 조성</li> <li>•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추진</li> <li>• 도심형 마을만들기 모델 운영, 휴먼서비스센터 설치</li> <li>• 격자형 철도네트워크 구축</li> <li>• 수원특례시 추진</li> </ul>
주요 키워드 <sup>4)</sup>			

출처: 수원시정연구원(2025b)

- 2) 민선8기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제외함
- 3) 시정백서, 언론기사, 인공지능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연구원 내부 연구진 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
- 4)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수원특례시 관련 언론기사(중앙 및 지역 모두 포함)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각 민선 시기별로 강조되는 주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분석함

## □ 리더십 차원에서 역대 단체장 모두 글로벌 마인드를 토대로 수원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세계적 도시로 발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

- 심재덕 시장은 글로벌 시각을 가진 초대 수원시장으로서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는데 결정적 역할 수행
  - 심재덕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세계라는 단어를 161번 강조하는 등 수원을 전 세계 글로벌 문화도시로 키워야 함 강조(한국경제신문, 1997.5.21.)
- 김용서 시장도 수원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원 화성의 완전 복원, 교통난 해소, 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
  - 김용서 시장은 수원, 화성, 오산을 통합한 경기 남부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(경기신문, 2010.4.12.)
-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 승격을 계기로 수원이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계적 도시로의 도약을 강조
  - 염태영 시장은 거버넌스 행정 도입 등 행정혁신을 통해 수원을 선도 도시로 브랜딩(경기신문, 2019.4.16.)

### <민선 시기별 시정연설 상위 키워드 20개>

연번	민선 1-2기 (심재덕)		민선 3-4기 (김용서)		민선 5-6-7기 (염태영)	
	키워드	빈도수	키워드	빈도수	키워드	빈도수
1	문화	193	문화	107	의회	124
2	<b>세계</b>	<b>161</b>	경제	79	복지	85
3	월드컵	122	교통	73	재정	74
4	환경	115	<b>세계</b>	<b>67</b>	행정	63
5	도로	112	교육	66	휴먼	61
6	경제	109	복지	65	일자리	60
7	미래	103	산업	64	환경	52
8	복지	99	화성	63	문화	50
9	개발	98	행정	59	미래	50
10	발전	97	도로	55	자치	49
11	행정	95	하천	54	경제	48
12	교통	95	첨단	54	안전	44
13	사회	91	국제	48	청년	42
14	화성	70	관광	47	참여	41
15	국제	63	미래	47	특례시	39
16	관광	62	참여	45	위기	32
17	준비	60	공원	37	<b>세계</b>	<b>32</b>
18	각종	53	노인	34	소통	28
19	중소기업	53	서비스	29	산업	24
20	산업	51	전국	28	역사/교통	23

## □ 역대 단체장들의 노력에 힘입어 수원시정 기반은 점진적으로 개선됐으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존재<sup>5)</sup>

- (정치 차원) 시민의 시정관심도 및 참여도를 알 수 있는 수원시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
  - 초창기 급격히 하락한 투표율(민선1기→2기: 14.9%p 감소)이 민선 3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
    - 특히, 제7회 지방선거의 투표율(59.4%)은 제1회 투표율 60.7%에 근접
  - 그러나, 총선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상황
    - 최근 3번(22·21·20대) 수원 관내 국회의원 선거 평균 투표율은 64.1%

<정치 차원에서의 변화\_지방선거 투표율>



출처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

- (행정 차원) 시민불편 및 삶의 질 개선과 밀접히 연관된 수원시 공무원 규모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개선되는 상황
  - 민선 3기를 시점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
  - 단,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복잡해지는 지역현안에 대응해(수원일보, 2025.10.28.), 공무원 총원 등 인력 운영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상황

<행정 차원에서의 변화\_공무원 1인당 주민수>



출처: 수원특례시 데이터 포털

5) 하혜수(2025)가 제시한 자치분권을 이해하는 3가지 관점인 정치분권, 행정분권, 재정분권 논리를 차용하여 시정변화 파악

- (재정 차원) 시민 불편해소와 시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과 연결된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
  - 2003년 경기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1조 예산 돌파 이후, 2015년 2조, 2020년 3조 예산을 기록
  - 그러나, 늘어나는 복지비와 지방소득세 감소로 재정운영의 자율성은 악화중('00년 89.0%→'25년 42.9%) (수원시정연구원, 2025a)

### <재정 차원에서의 변화\_세입 예산 평균(일반회계 기준)>



출처: 연도별 수원시기본통계

## □ 종합하면, 수원의 성장은 자치분권 제도의 다양한 변화를 끌어냈으나, 여전히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충분한 권한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

- (성과) 시민참여의 제도화 및 협치 문화 정착, 특례시 승격 등을 통해 기초 지자체 자치분권 향상
  - 무엇보다도 특례시 승격을 통해 수원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
- (과제) 지역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보는 여전히 미흡
  - 지역 내 교통 및 주거, 산업구조 재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 및 경기도의 적극적 협조 필요

### <민선자치 30년, 수원시 성과와 과제>

구분	성과	과제
민주주의 발전	• 주민참여예산제, 시민배심원제, 마을자치회 등 제도화로 정치적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	• 제도 중심의 자치에서 더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자치로 전환 필요
자치 기반강화	• 2022년 특례시 승격으로 자치권한 확대, 행정자율성 제도적 기반 확보	• 특례시 사무이양 지연으로 실질적 권한 미흡 •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 가중
생활 여건개선	• 돌봄서비스, 무상교통 시범사업 등 복지·교통·환경 중심의 시민체감형 정책 추진	•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·주거 불균형, 원도심 침체
지역특화 발전	• 수원 화성 등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·문화산업 발전	• 산업구조의 편중(일부 대기업 중심)으로 중소기업·청년창업 생태계 취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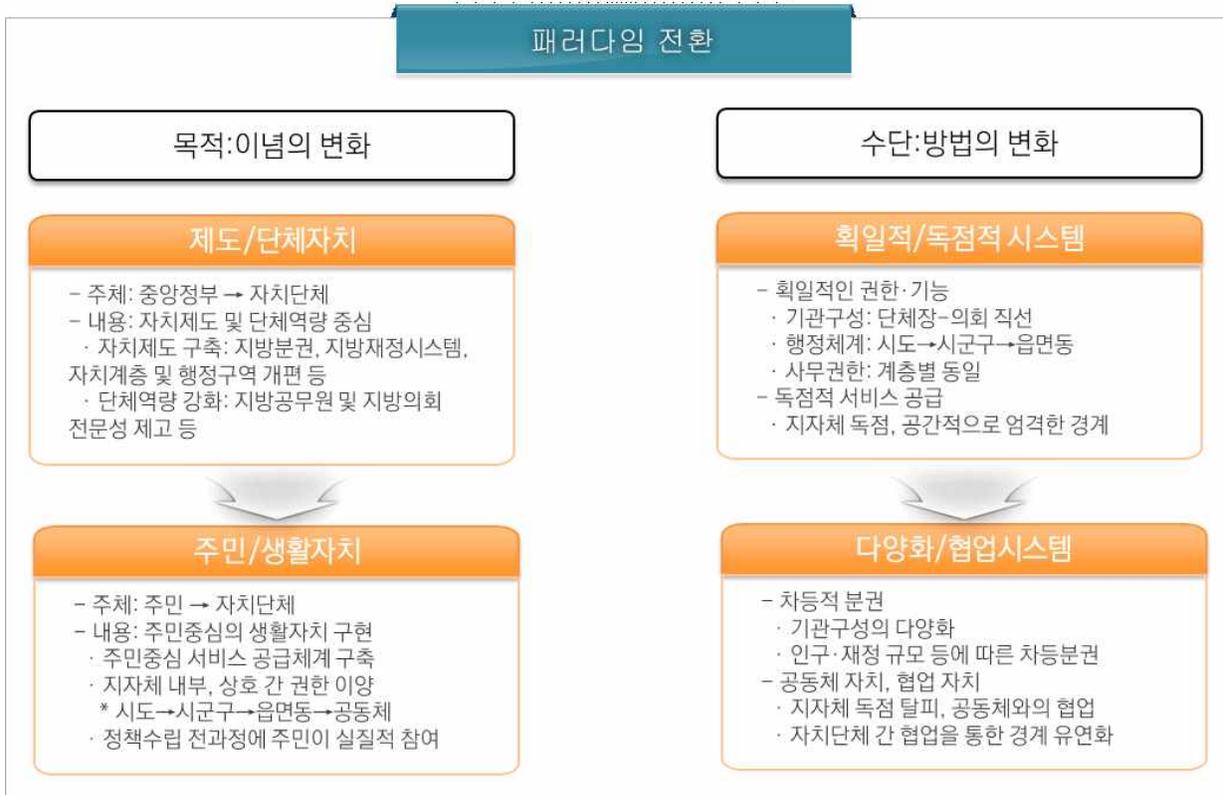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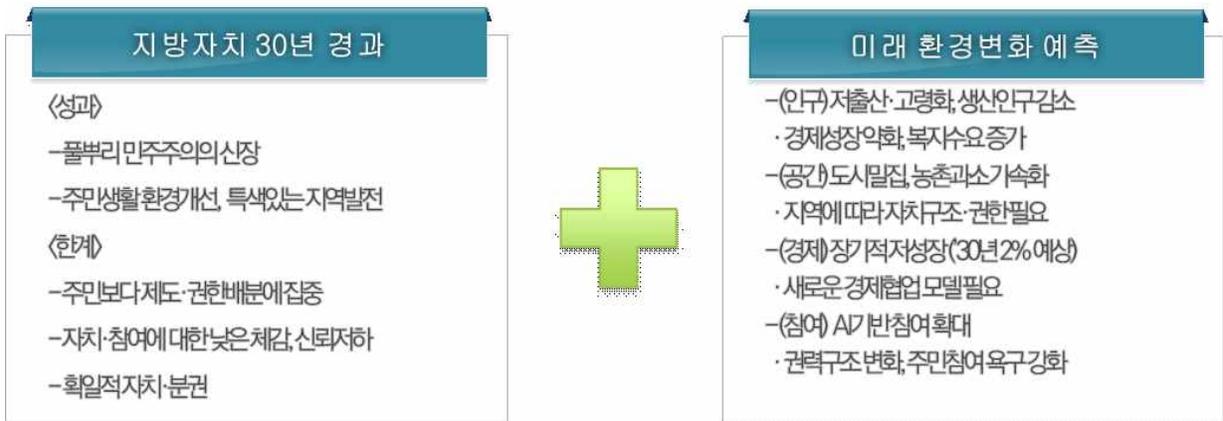
출처: 주요자료(신문기사, 백서 등)를 활용하여 정리

### 3. 미래 자치분권 방향<sup>6)</sup>과 수원특례시의 대응 방안

□ 생산인구 감소, AI 전환, 기후변화로 인한 자치분권 변화는 수원에 두 가지 함의를 제시

- 첫째, 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
- 둘째, 수단 차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자치 및 행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함

#### <대내·외 환경변화와 미래 자치분권 방향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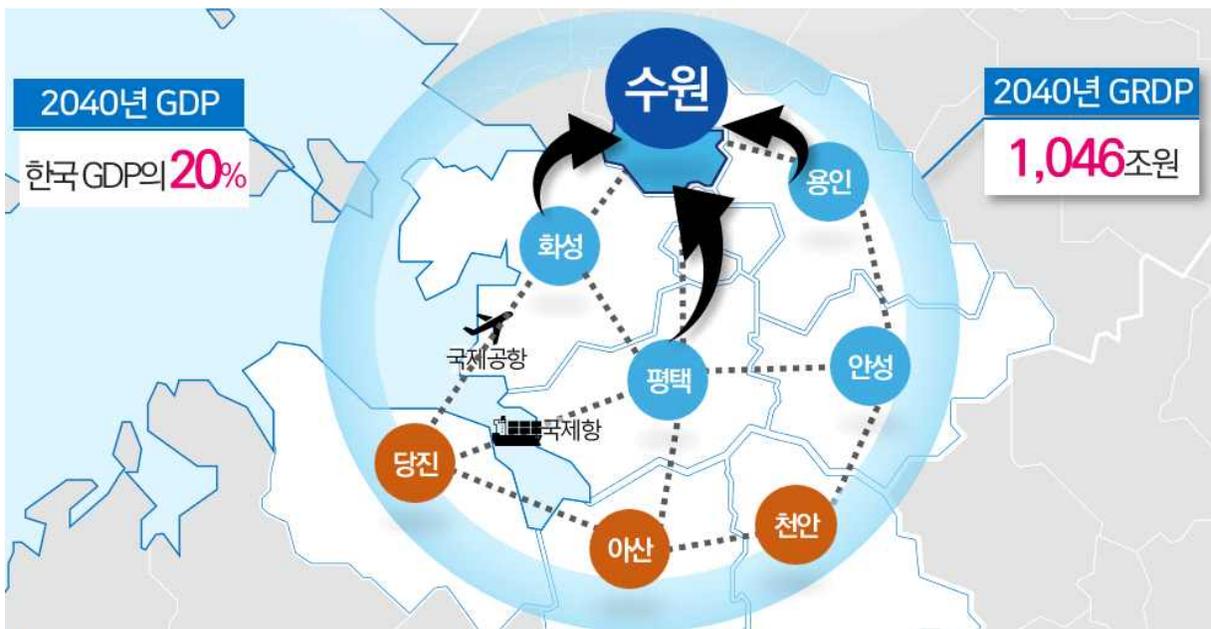
출처: 한국지방행정연구원(2021)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

6)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(총 13명)을 바탕으로 미래 지방자치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도출

## □ 전술한 변화의 방향을 토대로 향후 수원특례시의 대응 방향은 2가지로 구분됨

- 첫째,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써 ‘특례시 제도 개선’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
  - (미래전망) 미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,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행정이 정착하여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됨
  - (대응논리) 우수한 행정 및 재정 역량을 가진 대도시에 더 많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차등분권 방식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 어필
  - (핵심전략) 법적 지위 및 재정 혜택 등이 포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·개정,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특례시에 필요한 핵심 권한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
    - 이 과정에서 수원시 단독이 아닌 50만 및 100만 대도시 간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
- 둘째,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자원 낭비를 막고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해 ‘지역 경쟁력’을 제고
  - (미래전망) 미래 지방자치는 급격한 인구 감소, 기후변화 등 개별 지자체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일상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
  - (대응논리) 생활권과 행정권을 통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,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
  - (핵심전략) 특히, 산업적 시너지 제고 관점에서 수원과 인접한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의 주요 도시를 묶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‘K-메가시티’ 구성 추진
    - 수원은 연구·교육·R&D 중심도시로서 권역 내 중심 허브 역할 수행

### <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도시간 연계·협력 구상>



주: 최근 4년간 GDP 증가율(평균 4.5%)과 주요 도시의 GRDP 평균 증가율(7.0%)을 반영하여 추계  
출처: 2040 글로벌 수원 미래구상 포럼 (수원시정연구원, 2025a)

## □ 궁극적으로 이러한 대응은 향후 수원시가 2040 비전으로 제시한 ‘글로벌 첨단 과학 연구 도시’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

## 4. 결론 및 정책 제언

### □ 민선자치 30년 과정에서 수원은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

- 민주주의 발전, 자치기반 개선, 생활여건 개선, 지역특화 발전 등의 성과 창출
  - 거버넌스 행정의 활성화, 특례시 제도의 도입, 수원 화성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발전 추진
- 그러나, 생산인구 감소, AI 및 디지털 전환, 기후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 미부여
  - 준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 자치단체 틀 안에 갇혀 있는 상황 지속

### □ 향후 수원특례시는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지방자치 발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

- 현재 수원특례시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성공을 위해선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
  - 경제자유구역 지정, 수도권 규제(중과세 등) 완화 등이 필요
- 글로벌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지방자치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 건의
  - 특히, 지방정부 4대 협의체와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제도 개선 추진 필요

### □ 동시에 수원특례시는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제도 개선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

- 비수도권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
- 수원특례시, 용인특례시, 화성특례시 등 수도권 대도시가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상생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 모델 발굴 필요

#### ■ 참고문헌

- 경기신문 (2010). [6.2지방선거] 김용서 “통합시 명칭 삼성시” 4월 12일자  
<https://www.kg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230924>
- 경기일보 (2019). 수원시, 시정 전반에 참여 보장해 ‘시민 민주주의’ 실현하다. 4월 16일자  
<https://www.kyeonggi.com/article/201904161055927>
- 빅카인즈 홈페이지: <https://www.bigkinds.or.kr> (검색일: 2025년 6월 18일)
- 서울특별시 홈페이지: <https://news.seoul.go.kr/gov/archives/564563> (검색일: 2025년 9월 7일)
- 수원시정연구원 (2025a). 2040 글로벌 수원 미래구상 포럼 발표 자료(비공개). 수원시정연구원
- 수원시정연구원 (2025b). 데이터로 본 수원: 수원이 걸어온 길 나아가갈 미래. 수원시정연구원
- 수원일보. (2025). [기획특집] 민선 지방자치 30년, 대한민국 최고 특례시로 우뚝선 ‘수원시’ 성장과 영광. 10월 28일자.  
<https://www.suwonilb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12689>
- 수원특례시 데이터 포털: <https://data.suwon.go.kr/portal/main> (검색일: 2025년 9월 7일)
- 한국경제신문 (1997). [이제는 지방문화시대] (6) ‘수원’..인터뷰: 심재덕 <시장> 5월 21일자.  
<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1997052101631>
- 전성만 (2025). 한국의 민선자치 30년의 평가를 위한 방향성 정립 방안. 제30회 한·일 지역정책연구회 발표 자료.  
[https://krila.re.kr/bbs/board.php?bo\\_table=sub02\\_02\\_01&wr\\_id=931&page=2](https://krila.re.kr/bbs/board.php?bo_table=sub02_02_01&wr_id=931&page=2)
- 지방재정 365: <https://www.lofin365.go.kr> (검색일: 2025년 9월 7일)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: [http://info.nec.go.kr/main/main\\_previous\\_load.xhtml](http://info.nec.go.kr/main/main_previous_load.xhtml) (검색일: 2025년 9월 7일)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(2021).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자치분권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. 자체연구-02. 한국지방행정연구원
- 한겨레 (2020). “정치인 김대중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‘미스터’ 지방자치” 7월 26일자  
<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bar/955198.html>
- 하혜수 (2025).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. 2025 KDLC 지방자치분권 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



**SRI** 수원시정연구원  
SUWON RESEARCH INSTITUTE

# *Brief*

※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| 발행인 김성진 | 편집위원장 정재진 | 편집위원 강은하 김도훈 김타균 유현희 최석환 한연주